

#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요약

2017



광주광역시



# 목 차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	1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	1
2. 계획의 내용과 방향 .....	1
제2장 인권 논의의 변화와 인권도시 동향 .....	3
1. 인권의 의미 지형 .....	3
2. 국제 및 국내 인권 논의 현황 .....	4
제3장 광주시 인권정책의 현황과 평가 .....	7
1. 인권정책의 변화 과정 .....	7
2. 광주시 인권정책 평가 .....	8
제4장 광주시 인권실태조사 분석 .....	10
1. 실태조사 개요 .....	10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	10
제5장 광주시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	13
1. 광주시 인권도시 정책 SWOT 분석 .....	13
2. 비전과 정책목표 .....	15
3. 추진전략과 핵심분야 .....	16
제6장 광주시 인권도시 및 인권정책 추진과제 .....	18
1.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	18
2. 인권제도와 인권행정의 강화 .....	25
3. 인권공동체문화 형성 .....	26
4. 인권행정 협치체계 구축 .....	28
5. '인권도시 광주' 위상 제고 .....	29

제7장 광주시 인권도시 추진체계 .....	31
1. 추진체계 구축의 주요 방향 .....	31
2. 인권도시 광주 추진체계 .....	31
제8장 결론: 정책제언 .....	34
■ 참고문헌 .....	37

##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 지방정부가 인권의 의무 주체로서 중장기 인권도시 비전과 시민의 삶과 연계된 체계적인 인권 이행 전략 수립 요구됨
- ‘제1기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인권제도, 인권정책, 인권문화, 인권연대 등의 측면에서 성찰하고, 인권의 미래 환경과 광주의 인권지형을 고려한 ‘인권증진과 인권도시’의 통합 계획 수립

### 2. 계획의 내용과 방향

#### □ 공간적 범위

- 광주광역시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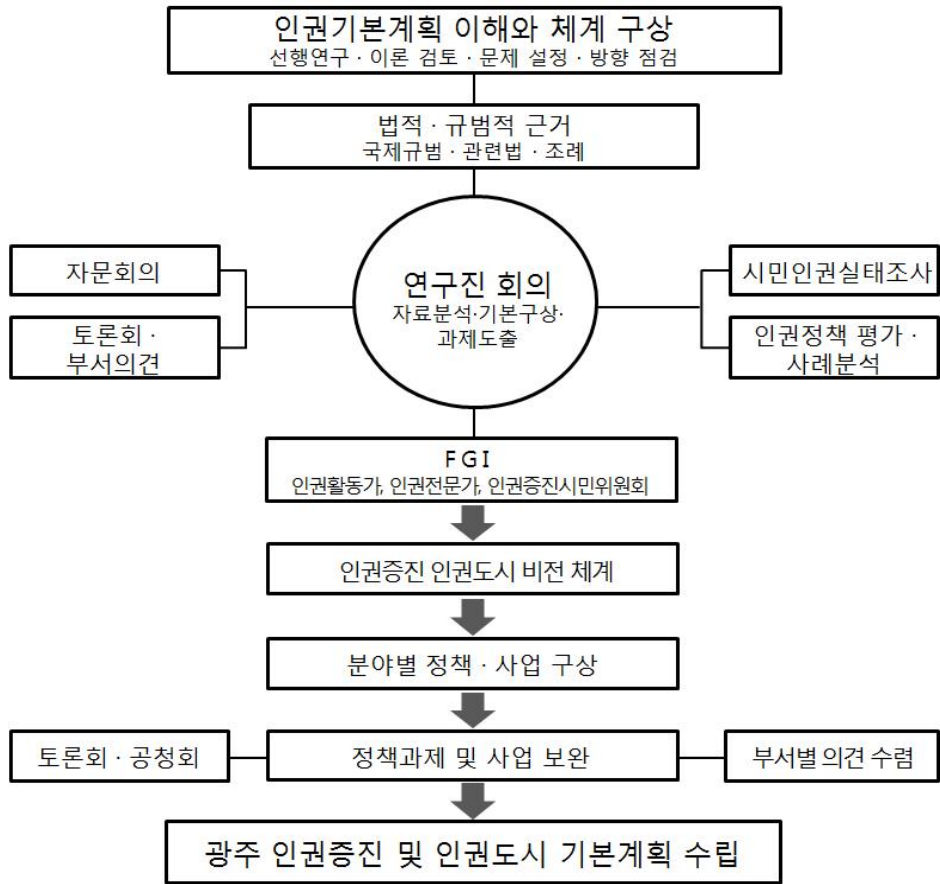
####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7년~2021년(5개년)
- 기준년도 : 2016년

#### □ 내용적 범위

- 인권환경·미래 진단과 사례분석
- 제1기 인권도시 기본계획의 평가
- 광주시 인권도시 정책 및 도시운영 평가
- 인권도시 정책 수요 조사 및 과제 도출(FGI)
- 광주 인권도시 정책비전과 전략 수립
- 인권도시로서의 인권체제 강화방안
- 인권증진을 위한 영역별 분야별 이행과제 수립
- 인권도시 실천 추진체계

<그림> 인권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정



## 제2장 인권 논의의 변화와 인권도시 동향

### 1. 인권의 의미 지형

#### □ 인권의 의미 확장

- 인권은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의 역할과 동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삶의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
- 인권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의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 잘 지켜지고 인권의 항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는 ‘좋은 도시’를 상징함
-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인권은 사회권과 연대권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연대권, 환경권 등이 부상하고 있음
- 인권과 관련된 최근 인식과 실천 지형을 종합해 보면, 인권은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가치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인권은 바람직한 어떤 목적, 행복한 어떤 상태, 인도적 가치, 공동체 지향의 삶의 관계 등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고 있음
- 최근 들어 ‘도시에 대한 권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거주자들이 도시의 공간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 삶의 환경 변화와 지역 인권정책의 재설정

- 인권은 개별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주된 규범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의 정책, 지역 시민사회 활동, 가정 및 개인의 일상적 삶에 필요한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인권을 매개로 한 다양한 요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권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함

## 2. 국제 및 국내 인권 논의 현황

### □ 국제적 흐름

-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5년 9월 제21차 회기에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자문위원회의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를 공식 채택
  - 보고서에는 광주의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소개하고 2014년 5월 17일 포럼에서 채택한 ‘인권도시 이행 원칙’을 언급
- 유엔은 2015년 9월,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이어받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회원국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
  - SDGs는 실천이 필요한 5대 행동영역으로 제시한 ‘5-P’(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동반자관계-partnership)는 단순히 경제발전을 통한 물질적 개선을 넘어 새로운 삶을 구상하고 있음
- 2016년 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Habitat III) 3차 회의에서는 도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시민은 누구나 도시에 대한 기회와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는 도시권을 포함하는 포용도시 관점 강조

### □ 국내적 상황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16)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강조되었던 빈곤, 건강, 교육, 성평등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분야별 핵심 과제 반영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확대
-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여성, 노인 등의 인권증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추진과제로 제시



&lt;표&gt;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주요 내용

권고 분야	진단	핵심추진 과제
빈곤, 건강, 교육	저성장 기조에서 사회경제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삶 악화	▷근로빈곤층 자활과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부조와 실업부조제도 확충 ▷국민건강을 고려해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방안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장애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위한 법과 제도 기반 구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과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유형별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접근권 보장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시설장애인의 인권 보호 등
아동청소년	아동학대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인프라 부족	▷아동의 불법입양 등 출생신고제도 개선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확대 ▷교육권 및 놀 권리 보장 ▷경쟁적 입시 및 교육제도 개선 ▷각종 아동폭력 근절 대책 마련 등
여성	저출산, 다양한 유형의 성차별, 사회·경제적 배제에 대응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여성 대표성 확대 등
노인	노인의 빈곤,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노인의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차별 근절 대책 마련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노인학대 예방 대책 ▷독거노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 등

□ 인권도시 운동

- 2011년 광주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인권도시를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동체와 사회 정치적 과정”으로 보고,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기업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인권기준과 규범에 근거한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 거버넌스”로 정의
- 인권도시는 완결된 운영 모델을 갖춘 정형화된 도시라기보다는 각각의 도시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음
- 인권도시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우선 여성이나 이주민, 원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별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시민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차원에서 직접 나서고 있음(우필호·강을영, 2013: 48)
- 인권도시는 규범으로서의 인권을 넘어 도시차원에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자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권조례, 인권기본계획, 인권지원기구(인권센터) 등의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 국내 광역·기초 지자체별 인권기본계획의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의 경우 인권조례가 제정된 16개 지자체 중 10곳(62.5%)이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기초의 경우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75개 지자체 중 12곳(16%)이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많은 지자체들이 인권도시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면서 인권을 시민의 삶과 더욱 친숙한 것, 그리고 시급한 현실의 과제로 전환시켜가고 있지만, 일상생활 규범이나 도시정책 등이 인권의 가치와 부합되도록 하는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인권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도시에서의 인권논의와 실천은 각자의 역사성과 시간성을 지닌 도시 내부의 자원, 공간, 사람들을 재조직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그 성과를 다른 도시로 확산시켜가는 통합적·협력적 접근이 중요(김기곤 외, 2016: 21)
- 광주광역시시는 2017년부터 적용될 5개년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정책에 대해 분야별 인권 쟁점을 반영하고, 국제적 기준과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3장 광주시 인권정책의 현황과 평가

### 1. 인권정책의 변화 과정

#### □ ‘인권도시 광주’의 역사

- 광주에서 인권은 5·18의 주요 국면과 그 속에 담긴 상징적 사건을 가치론적 측면에서 재해석하면서 부상함
- 1980년 5월 이후 ‘5·18의 정당성 획득과 인권으로 확장기(1980년대~1990년대)’, ‘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 형성기(2000~2010)’, ‘인권도시의 제도화 기반 구축기(2010년 이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 발전
- 민선 5기(2010. 7. 1.~ 2014. 6. 30) 동안 광주시의 인권정책은 시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각종 규범, 제도, 조직을 구축하는 ‘인권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었고, 인권전담부서, 인권조례, 인권도시기본계획, 인권현장, 인권지표, 인권옴부즈맨 등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성과물임

#### □ ‘제1기 광주시 인권도시 기본계획(2012~2016)’ 특성과 한계

- 인권기본계획의 종합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과도기적 계획으로 광주인권현장이 제정되기 이전에 광주인권현장 및 인권도시 정립에 기여한 계획
-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인권도시기본계획 사이에서 뚜렷한 자기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100대 인권지표개발을 핵심내용으로 삼아 구성체계 불균형
- ‘인권도시’ 상징화(브랜딩) 등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인권증진 목표와 추진과제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못함
-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과 인권도시운영 계획의 성격을 모두 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와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구성
-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 내용은 100대 인권지표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구상되어 전체적으로 인권도시 육성계획에 맞추어져 있음

## 2. 광주시 인권정책 평가

### □ 인권정책 성과

- 광주는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음
- 광주의 인권도시 프로젝트는 국내외적으로 인권도시 담론의 확산과 정책적 실천을 촉발시켰음

<표> 제1기 인권도시기본계획 기간 광주시 인권정책과 제도

주요 영역	주요 내용
인권기구	- 인권평화협력관실(2010) - 인권옴부즈맨(2013)
인권제도와 장치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07, 2012) - 광주인권도시 기본계획(2012) - 광주인권헌장(2012) - 인권지표(2012) - 핵심인권지표(2015) - 인권행정 실천도 평가(2012)
인권거버넌스	- 인권증진시민위원회(2012) - 인권정책 연석회의(2012) -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2012)
인권문화 형성	- 인권교육(2012) - 인권단체 협력사업(2012) - 인권문화공동체 만들기-인권마을(2013) - 인권공모전, 인권증진 아이디어개선사업, 인권헌장 확산사업(2012)
인권교류	- 세계인권도시포럼(2011) - UN인권이사회 ‘지방정부와 인권’ 의제화(2013) - 아시아 광주진료소 운영(2013)-캄보디아 2013, 네팔 2017 - 인권행정협의회-시·자치구 인권담당자 회의(2014)

### □ 한계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범, 제도, 조직을 구축하는 인권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지 못함

-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이 ‘100대 인권지표’을 통해 추진됨으로써 정책추진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성과관리 측면에 치중됨
- 인권정책이 전체 행정에서 안정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인권과제의 부서별 수용력이 취약
- 행정에서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인권정책전달체계가 약하고, ‘인권도시 광주’라는 상징적 위상에 걸맞는 인권담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지 못함

<표> 제2기 인권도시계획의 대응 방향

제1기 계획	항목	제2기 계획	비고
인권도시계획에 비중	위상	인권증진계획과 인권도시계획 통합	재조정
제도적 기반 구축	특징	시민주체 인권증진 활동	계승
공감, 창조, 인권도시	비전의 키워드	공존, 포용, 연대, 참여, 인권 공동체	개념의 확장
참여, 돌봄, 연대 등 공동체 원리 강조	구성 원리	시민들의 공존과 포용 강조, 책임 있는 연대 등 광주의 책무 강조	포용도시 관점 강조
인권의 실질화, 인권도시 국제화	목표 설정	시민 인권증진 실질화, 인권행정 고도화, 다층적 협력 인권도시	구체성, 현실성 강조
인권지표와 지수 인권현장과 인권조례 인권도시 브랜딩 인권교육과 학습 인권도시 국제네트워크	추진전략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인권제도와 행정의 강화 지역사회 인권문화 증진 인권행정 협치체계 강화 국제사회 인권도시 위상 제고	분야별 전략 설정
인권부서 중심의 단위사업 추진	추진체계	인권행정 조정 및 관리 기능 제고, 인권정책 협치 시스템 구축	협치

## 제4장 광주시 인권실태조사 분석

### 1. 실태조사 개요<sup>1)</sup>

####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광주광역시 시민
  - 일반시민 : 지역(인구비례), 성, 연령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 청소년, 노인, 비정규직노동자,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이주여성 : 임의 표집
- 전체 유효 표본 수 : 1,201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

###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 □ 주요 내용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1,201명)의 인권의식(자유권·사회권·안전권·문화권)에 대한 종합점수는 평균 65.4로 다소 보통수준으로 평가
- 광주시 인권침해(자유권·사회권·안전권) 수준의 평균점수는 51.8점으로 중립적인 평가
  - 장애인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인권침해 수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장애인과 일반시민(비정규직 노동자 포함), 북한이탈주민은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 나이, 학력, 비정규직,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상황, 사상·이념, 성적 지향, 종교, 임신·출산, 범죄경력, 병력, 경제력, 직업 등 15개 항목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경험에 대한 평균점수는 35.8점으로 기준점보다 낮았음
- 광주광역시의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평균점수는 57.9점으로 기준선보다는 높지

1) 이 실태조사는 광주시가 '인권지표 시민인권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2016년 12월 7일~2017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임

- 만 다소 보통수준이었음
- 영역별로는 자유권의 평균점수가 60.5점으로 가장 높아 다소 긍정적이었으며, 안전권의 평균점수가 53.7점으로 가장 낮았음
  - 광주시 인권행정(시민인권보장, 행정서비스 만족, 인권 증진을 위한 타시도와 협력, 시민과 단체의 참여 보장, 행정담당자들의 인권증진 노력)에 대한 평균점수는 58점으로 기준선보다 높았으나 보통수준이었음
  - ‘인권도시가 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문항은 79.9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인권도시가 되면 광주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72.5점)’, ‘인권도시 정책은 5·18 정신을 계승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다(70.7점)’ 순이었음
  - 인권정책 인지도의 평균점수는 35.1점으로 기준점에 비해 낮았음
    -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정책은 ‘세계 인권도시 포럼 개최(43.1점)’였으며, 가장 낮은 인지도의 정책은 ‘인권 옴부즈맨 제도 운영(31.3점)’이었음
  - 인권도시 정착에 필요한 것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시민들의 인권의식 장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7%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비 및 확대 36.5%, 사회복지 확충 32.7%로 시민들의 자발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제도의 정비 및 기본적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도시 육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기관/단체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광주시 62.54%, 시민 42.7%,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 41% 순으로 나타남
  - 인권교육 경험에서는 남성은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49.3%가 인권교육을 받은 반면, 여성은 52.5%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의 가정 이외의 차별에 대한 경험 중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외국인 노동자가 겪은 차별 경험 중 ‘한국말이 서툴러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음
- **조사결과의 시사점**
- 광주시민들의 인권의식은 사회권과 문화권 영역이 높았고 자유권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안전권이 평균보다 못 미치는 인식을 보였음

- 광주시 일반시민들은 인권도시 정책에 대한 긍정성은 높은 반면 인권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약자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인권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사회적 약자 집단보다 더 낮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정책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비정규직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행정의 만족도 향상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서비스와 행정담당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됨
- 장애인 인권정책은 경제활동의 주체로 의식을 확보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일자리 및 정보접근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장애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이 시급함
- 일반시민의 인권교육 경험은 약 50%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몇의 활동가나 한 두 곳의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권교육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자치단체차원에서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설계되고 이루어져야 함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러한 인권침해나 차별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실제 당사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보임



## 제5장 광주시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 1. 광주시 인권도시 정책 SWOT 분석

□ FGI 주요 결과

- FGI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2명, 인권증진시민위원회 3명, 서울지역 인권전문가(활동가) 2명, 지역 인권전문가(활동가) 7명 등 총 14명

제1기 계획 및 인권정책 평가		제2기 계획 인권도시 기본계획 구성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등 광주 특성을 반영한 인권도시 체계 구축</li> <li>○ 인권행정을 위한 제도화 기반 조성</li> <li>○ 종합 인권기본계획으로서 선구적 역할</li> <li>○ 시민참여 통한 인권지표와 광주인권현장 제정은 최대 성과</li> <li>○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틀 제시로 인권도시 발전 촉발</li> <li>○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세계인권도시 간 교류 기반 확보</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 현실 고려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델 구축</li> <li>○ 인권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참여권 강화를 중심으로 설계</li> <li>○ 핵심적인 인권 개선 과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구성</li> <li>○ 인권지표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 수립</li> <li>○ 5·18과 인권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li> <li>○ 인권거버넌스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구상</li> </ul>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삶과 직결되는 인권의 내재화 목표나 전략 미약</li> <li>○ 인권부서의 인권정책의 총괄 지휘 기능 미약</li> <li>○ 인권부서와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미흡</li> <li>○ 인권교육 중장기 플랜의 부재</li> <li>○ 100대 지표를 평가하는 장치나 과정이 모호</li> <li>○ 인권도시 브랜드를 지나치게 경제적인 가치로 접근</li> <li>○ 예산계획이나 연도별 이행 계획 등이 부족해 실효성 부족</li> </ul>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계 및 가동</li> <li>○ 미세먼지, 원전 등 환경권, 도시재생, 문화도시 정책 연계</li> <li>○ 인권마을 등 시민 자력화 방안</li> <li>○ 4차산업혁명과 저성장·양극화 등 고려, 노동과 휴식 의제</li> <l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계획과의 연계</li> <li>○ 인권옴부즈맨, 인권시민위원회, 인권부서 위상 역할 개선</li> <li>○ 인권행정에서 행정부서간의 인권적 협력관계 구축</li> </ul>

□ SWOT 분석과 기본전략

<그림> 광주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SWOT 분석

SWOT 분석과 전략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도시 광주 상징성 지속</li> <li>○ 5·18등 인권 역사 자원 풍부</li> <li>○ 제1기 계획 기간 인권제도 기반 구축</li> <li>○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인권교류 경험</li> <li>○ 시-자치구 인권행정 필요성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시 인권제도의 시민 인지도 저조</li> <li>○ 시 부서간 인권협치시스템 미약</li> <li>○ 시민사회와 인권협력체제 미약</li> <li>○ 시민의 생활 속 인권규범 부족</li> </ul>
기회 (Opportunity)	S-O 전략 (강점으로 기회 활용)	W-O 전략 (약점 보완 기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적 지역인권제도 관심 증가</li> <li>○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인권 의식 제고</li> <li>○ 공동체성, 민주주의 등 연계 가치 부상</li> <li>○ 시민참여·협치 등 인권활동분위기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제도를 활용한 실질적 인권 증진</li> <li>- 5·18정신, 공동체 등 가치 인권문화 확산</li> <li>- 인권행정에 시민참여와 협력 강화</li> <li>- 인권도시포럼의 성과 활용한 교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력의 인권실천 추진체계 구축</li> <li>- 시민참여를 통한 인권실천 프로그램 확대</li> <li>- 지역간 인권교류로 인권제도 확산</li> <li>- 시민참여형 인권교육과 공동체 활동</li> </ul>
위협 (Threat)	S-T 전략 (강점으로 위협 최소화)	W-T 전략 (약점 보완 위협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인권행정 공감대 약화</li> <li>○ 다문화 확산으로 인권수요층 확대</li> <li>○ 광주시 인권정책의 선도성 약화</li> <li>○ 소수자 혐오세력의 인권왜곡 여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자치구 인권행정협력시스템 구축</li> <li>- 새로운 인권제도 확대로 인권정책 선도성 강화</li> <li>- 문화전당 등 인프라 활용한 다양성 교육</li> <li>- 5·18공동체 정신으로 포용도시 지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인권현장 활용한 시민인권교육</li> <li>- 공무원의 인권행정 역량 강화 교육</li> <li>-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운영</li> <li>- 인권도시추진 시민참여방안 확대</li> </ul>

## 2. 비전과 정책목표

- ‘인권도시 광주’ 의미 구성
- 인권문화가 확산되는 인권공동체, 인권체제의 기반이 탄탄한 도시, 시민참여의 협치형 인권실천 도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인권도시, 연대와 공헌으로 인권도시 선도하는 광주 등의 의미를 포괄

<그림> 제2기 ‘인권도시 광주’ 의미 구성 체계

제2기 ‘인권도시 광주’ 의미 구성	공동체, 포용, 행복	인권문화	인권공동체
	인권제도, 인권행정	인권체제	
	시민참여, 공동해결	인권협치	
	미래 인권의제·방안 창출	인권대응	
	도시 연대, 공헌, 책무성	인권선도	

- 비전
-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
  - 광주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존중받으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포용적 인권공동체를 지향
  - 광주가 쌓아온 인권도시의 역사와 경험을 지구시민과 함께 나눔으로써 인권도시 광주의 역할과 책임을 확장시켜나가는 실천적 인권도시 강조
  - 존중, 포용, 참여, 공동체, 연대 등을 주요 가치로 설정
- 정책목표
- 제2기 광주시 인권도시 기본계획의 3대 정책목표를 ‘시민의 인권증진’, ‘인권도시 기반 확대’, ‘인권행정 협치 강화’

### 3. 추진전략과 핵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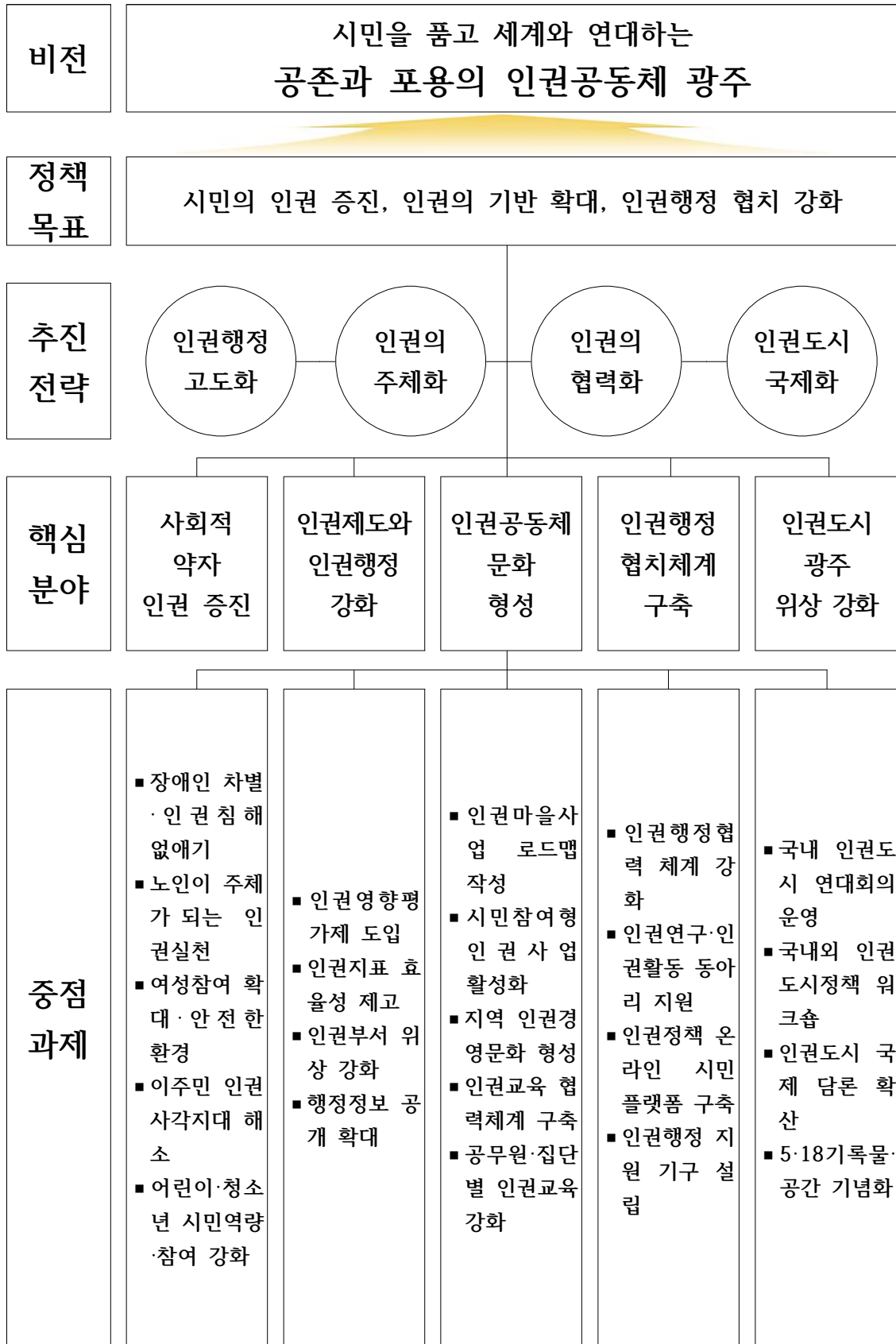
#### □ 4대 추진전략

- 인권정책의 고도화 - 인권제도와 인권행정의 효과를 증진
- 인권의 주체화 -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인권역량을 강화
- 인권의 협력화 - 지역, 도시 등과 인권실천 협력을 제고
- 인권도시 국제화 - 인권도시 광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

#### □ 핵심분야와 중점과제

- 첫째,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증진 과제
- 둘째, 인권제도와 행정의 강화
  - 인권지표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적 증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권부서의 위상 강화
- 셋째, 인권공동체 문화 형성
  - 지역사회 인권문화증진, 마을단위 시민 인권 프로젝트 활성화,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 인권교육 확대 및 체계 개선
- 넷째, 인권행정 협치체계 구축
  - 광주시 인권행정협력체계 강화, 시민사회와 인권협력체계 구축, 인권행정지원기구 설립
- 다섯째, ‘인권도시 광주’ 위상 제고
  - 국내 인권도시 연대회의 운영, 국내외 인권도시정책 워크숍 정례화, 아시아 인권도시 연대 프로그램 운영, 국제 인권규범과 담론 확산

<그림> 제2기 광주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비전 체계



## 제6장 광주시 인권도시 및 인권정책 추진과제

### 1.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어린이·청소년

#### □ 장애인 인권증진 과제

##### ○ 현황

- 광주광역시 등록 장애인은 2016년 12월 현재 68,569명 중 남성은 38,538명으로 56.2%, 여성은 30,031명으로 43.8%
-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인권 및 복지와 관련된 장기계획이 마련되고 있지만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 추진방향

-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시설물 및 정보 등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대 개선
- 자립생활 등 자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보장

##### ○ 추진과제

추진목표	핵심과제	세부과제	주요 사업 내용
생활 속 차별 해소와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차별과 인권침해 없는 지역사회 조성	일상에서 차별요소 없애기	정보접근 및 참정권 보장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생활환경 조사 /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의 문화, 여가, 체육활동 활성화 등
		인권침해 없는 복지시설 만들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 / 노숙인시설 생활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자립지원 계획 수립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탈시설-자립생활 환경 만들기	탈시설-자립생활 주거 지원 /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자립정착금 지원 / 건강검진 및 치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 등

추진목표	핵심과제	세부과제	주요 사업 내용
	있는 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환경 만들기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임대주택 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확대 /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지정·운영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과 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 등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환경 만들기	저상버스 확충 / 장애인콜택시 확충 /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 / 발달장애인을 위한 역사시설 안내판 설치 / 지하철 수직이동시설 설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인 참여 장치 만들기	장애인 인권 및 복지 관련 조례 개정 / 각종 위원회 중복 방지 및 통합/ 시민대상 의견 공모 추진 / 시설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만남의 날 등
		장애인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조성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 장애인 복합 인권타운 조성

## □ 장애인 인권증진 과제

### ○ 현황

- 2016년말 광주시 노인인구는 172,572명으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고 광주시 동구는 19,413명으로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노인들의 소통, 관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들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며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을 위한 인권목표는 없는 실정임

### ○ 추진방향

- 노인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노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실천을 확대
- 모든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인 관련 기관의 노인학대 예방사업 확대와 국가-지방-민간이 협력하는 치매노인 돌봄 체계 강화

○ 추진과제

추진목표	핵심 과제	세부 과제	사업내용
안전하고 당당한 노년의 삶	노인이 주체가 되는 인권실천	노인을 위한 인권문화 확산	나를 위한 2시간 인권교육 / 노인생애설계서비스 / 노인인 권수첩제작
		노인이 참여하는 인권활동 확대	노인인권강사양성 / 노인인권 지킴이단 운영 / 노인인권캠페인
	건강한 삶을 위한 치매 돌봄 강화	치매노인 돌봄 체계 강화	광역치매센터 운영 활성화 / 치매노인실태조사 / 치매가족 휴가제 / 치매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노인 인권침해 대응 협력체계 구축	노인 관련 기관 인권운영 강화	노인관련 기관 및 단체 생활자 (이용자) 인권보장 서약 / 노인 관련 기관 및 단체 인권운영가 이드 및 점검표 제작·보급
노인권익옹호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검토 / 위원회 구 성 및 운영	

□ 여성 인권증진 과제

○ 현황

- 광주시 여성 1인가구수는 2010년 22.4%에서 2015년 22.9%, 2035년 28.6%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야간보행 시 한국여성의 두려움은 OECD 평균의 2배,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76.2%(2014년 기준)로 높게 나타남
- 광주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34.0%이지만,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14.9%로 나타나 여성의 대표성 낮음

○ 추진방향

- 인권정책에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부문에서 여성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해결
- 여성의 사회참여나 고용 등에서 여성의 차별을 개선하고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 추진과제

추진목표	핵심과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양성평등과 여성의 안전한 삶	여성의 참여권 확대	지역 여성 대표성 제고	지역정당 네트워크 활동 / 여성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점검
		위원회 여성참여 및 시민여성위원 활성화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관리 / 여성위원 신규 발굴 및 여성 DB 등재
	성별 고용차별 개선	성별임금격차 모니터링 강화	직종별·고용형태별 성별임금 격차 현황 모니터링 / 특정계층 취업 성차별 요인 연구 / 여성고용개선환경자금 이용 활성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주요 공단 비정규직 여성 노동환경 조사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여성1인가구 안전지원정책 강화	여성1인가구 방법예방기준 마련 / 여성1인가구 안전시스템 시범사업
		주요 도시계획 성별영향평가분석	광주광역시 2030 도시기본계획 성별영향 분석평가 /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친화마을 안전시스템 강화	여성친화마을 대상 물리적 안전시스템 강화 / 마을만들기 안전시스템 확산
	여성폭력 걱정없는 삶 실현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내실화 / 공공기관 및 기업대상 폭력예방교육 강화 / 여성폭력예방 인식변화 위한 교육확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정비	마을단위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네트워크 구축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활성화
		폭력 피해자 사후 처리 및 자립시스템 강화	폭력 피해자 대상 지원 강화 / 폭력 피해자 대상 경제적 자립지원

□ 이주민 인권증진 과제

○ 현황

- 광주시 거주 이주민은 2011년 18,824명, 2012년 20,649명, 2013년 22,291명, 2014년 24,466명, 2015년 29,131명으로 해마다 8~10%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1,502천명)의 1.9% 차지
-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맞추어져 다양한 이주민의 삶을 포괄하지 못함

○ 추진방향

- 이주민 인권정책은 선주민의 다문화 민감성을 높여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존의 관점을 중시하고, 이주민의 사회참여활동과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지향
- 기존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정책을 노동자 등 모든 이주민으로 확대하고, 특히 미등록노동자, 난민 등 법과 제도의 밖에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와 증진 정책 강구

○ 추진과제

추진목표	핵심과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이주민 권리 증진과 평화로운 공존 기반 조성	이주민 인권 바로 알기	선주민의 다문화 민감성 교육	공무원 대상 다문화 민감성 교육 / 다문화 인권강사 양성 사업
		이주민의 '시민되기' 프로그램 운영	이주민 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이주민 대상 '시민되기' 교육 / 이주민 청소년 인권평화 캠프 운영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노동자·난민 지원 확대	미등록 이주민(노동자, 난민) 및 자녀의 건강 및 의료 지원 확대 / 난민의 법적 절차 및 통역 지원
		무국적 및 이주배경 아동 지원	이주민 아동의 출생등록 지원 / 무국적 아동 민간센터 지원
	이주민 인권증진 협치 시스템 구축	이주민 참여 다문화협의체 구성	다문화협의체 구성 운영 / 이주민 문화공동체 지원
		이주민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이주민 관련 통합 부서 신설 / 광주이주민종합지원센터 설립

## □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 과제

### ○ 현황

- 광주시의 만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인구는 323,485명(광주 전체 인구의 22.05%)으로, 남자가 167,570명, 여자가 155,915명이며, 저출산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부모들의 아동학대 문제, 학업 중단학생의 교육권 문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체계적인 인권정책이 미약

### ○ 추진방향

-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정책의 주요 권리영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참여권 증진,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친화도시 추진 체계 강화 등 추진
- 정치적 참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탈가정 청소년 지원,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 아동학대 등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부각되는 새로운 인권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렴한 정책 개발

○ 추진과제

추진목표	핵심과제	세부과제	주요 사업 내용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한 광주공동체	어린이·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 및 참여 증진	어린이·청소년 참여 시스템 정비	어린이·청소년 참여 증진 방안 연구 / 어린이·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 및 모니터링 참여 보장 / 주요정책 온라인 투표제 등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동아리 공모사업 / 교육청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등
	특정 계층 어린이·청소년 차별 해소 및 인권 보장	어린이·청소년 소수자 인권 안전망 구축	청소년 한부모, 탈가정, 이주배경, 성소수자 등 어린이·청소년 소수자 인권실태조사 /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니터링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취업훈련체계 마련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서비스 개발 / 직업훈련기관 연계/ 지원 조례 제정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노동·복지권 보장	광주형 민주학교 시범운영 / 교육문화 바우처 제도 검토 / 학교밖 전문상담인력 배치 검토 / 중장기 쉼터 확충 및 시설 개선 / 청소년 일자리 발굴/ 청소년 작업장 지원 확대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체계 강화	어린이·청소년 전담옴부즈맨 배치 / 학원인권침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인권교육 체계 강화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어린이·청소년 인권 체험관 설치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마을 조성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 어린이·청소년 여가·놀이 공간 조성 /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 2. 인권제도와 인권행정의 강화

### □ 제1기 계획 평가 및 제2기 계획 방향

- 인권 관련 기본 제도의 선도적 구축에도 불구하고 인권정책이 행정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한계
- 인권제도의 인지도와 인권정책의 수용력 제고, 인권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장치 정비 및 확충

### □ 주요 추진과제

- 인권영향평가제의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행 규칙을 마련하여 ‘인권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 확보’
  - 인권영향평가표 개발, 운영 매뉴얼 및 실행 조직 등 운영 기반과 전반적인 ‘인권영향평가체계 구축’
  - 조례 제정 등에 대해 시범적 적용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단계적 적용, 2019년 이후 적용 범위 확대 등 ‘인권영향평가 단계적 도입과 확대’
- 인권지표 운영 효율성 제고
  - 광주인권현장과 연계된 체제를 유지하되, 지표의 대표성, 내용의 명확성, 통계 및 자료 확보 가능성 등 기준으로 ‘100대 인권지표의 지표항목 수정 및 재구성’
  - 단순 관리되고 있는 인권지표가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의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핵심인권정책지표 선정’ 관리 운영
  - ‘정성적 지표의 실태조사 주기를 2~3년으로 조정’하고 인권취약 계층이나 특정 권리영역별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차원 인권정보와 데이터를 축적
- 인권전담부서의 정체성 및 위상 강화
  - 인권전담부서의 전문성과 인권정책 업무의 집중성 제고를 위해 인권평화협력관실 내부의 ‘5·18 업무 조정 및 인권정책 기능 집중성 제고’
  - 인권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 담당사무관(5급 상당) 등을 대상으로 ‘개방형 전문인력 확충’ 및 ‘인권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현재의 ‘인권평화협력관실을 (가칭)「인권도시국」으로 승격’하고 그 내부에 ‘인권정책과’, ‘인권연대과’, ‘5·18민주기념과’ 등 3개과로 재편

- 인권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 광주시의 정보공개 요구 민원에 대한 현황 및 정보이용 현황 파악 등 ‘광주시 정보공개 관련 민원분석 및 미공개 정보 분야 전면 개방’
  - 광주시청 및 5개 구청의 모든 행정문서 및 유관 보고서, 지침 등 자료를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쉽게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를 축적·처리하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성과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 대상의 정보인권교육 확대’

### 3. 인권공동체문화 형성

- 제1기 계획 평가 및 제2기 계획 방향
- 인권 관련 제도 구축에 운영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인권문화 형성에 관한 포괄적 실행계획을 담지 못함
- 인권공동체문화 형성은 인권의 옹호자이자 인권실천의 주체인 시민들의 인권주체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 확대 및 시민참여 인권프로젝트 활성화
  
- 주요 추진과제
- 인권마을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인권마을에 필요한 기본원칙, 필수요소, 실행구조 등을 담은 ‘인권마을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인권마을 초, 중, 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과 방법, 각 단계에서 집중해야 할 영역 등을 구분해 ‘인권마을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인권마을사업 참여 실무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사업참여 동기 부여 제공
- 시민참여형 ‘인권프로젝트’ 사업 추진
  - 인권문제 발굴, 실천활동, 조사·연구, 캠페인 등 ‘시민인권프로젝트 사업 활성화’
  - 인권작품 공모전 분야 확대 및 활용 방안 마련
  -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순례, 무등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권문화 확산 홍보
- 지역 기업의 인권경영문화 형성 지원

- ‘광주지역 기업인권경영증진협의회’ 활동 재개 통해 인권경영의 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 노조, 인권단체, 전문연구자 참여 확대
- 올해의 기업인권경영상, 인권친화기업인증제 등 ‘기업인권경영 활동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 비정규직의 차별,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임금체불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인권경영 캠페인 확산’
- 인권교육센터 설립,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발굴 등 ‘제1기 미이행 인권교육사업 계획 계속 추진’
-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연계 주제 개발
  - ‘인권교육행정협의회’와 ‘인권교육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 내 민간영역에서 인권을 주제로 하는 강좌, 토론회, 문화예술행사, 실천활동,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권교육으로 인증해 주는 ‘인권교육 인증 과정 등록제 신설’
  - 인권교육의 주제와 내용을 확대 재정립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 등과 연계해 인권교육 외연 확대’
  - 지역의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참여 강사풀 관리’
- 공무원 인권교육 내실화
  - 각 영역별, 직무 단계별로 대상자에 따라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인권교육 가이드라인 도입’
  - 인권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권행정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 인권교육 참여 실적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참여 우수 공무원’ 시상
  - 현장 중심의 체험형 인권교육과 인권제도 등과 연계된 실무형 인권교육을 결합해 광주만의 ‘공무원 인권교육 혁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계층별·집단별 인권교육 활성화
  - 학교밖 청소년 또는 비학생 청소년, 어린이·청소년 시설 종사자, 학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확대’
  -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재 대학과 인권교육 MOU 체결
  -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경로당 등 ‘소외계층 대상 인권교육 점진적 확대’

## 4. 인권행정 협치체계 구축

### □ 제1기 계획 평가 및 제2기 계획 방향

- 인권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권협력행정 시스템의 부재와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시민적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부족
- 광주시가 ‘행정의 인권화’와 ‘인권의 주류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 내부, 행정과 시민사회 등 각 단위별 인권행정 협치체계를 구축 운영

### □ 주요 추진과제

- 광주시 인권행정협력체계 강화
  - 광주시 차원의 인권 관련 긴급 현안, 행정 기획 및 정책 중 인권 관련 주요 사안,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인권과제 등에 대해 시장 주관으로 협의·결정·조정 기능 수행하는 ‘광주시 인권업무조정협의회’ 구축 운영
  - 인권정책 실행계획 수립, 인권 관련 단위 사업 추진, 사업의 평가 등을 해당 실무 부서가 협력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협치 창구로 ‘광주시 부서간 인권행정협치회의’ 구성
  - 자치구 단위에서도 인권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권행정지원과 공동사업 등을 협의하는 ‘광주시-5개 자치구 인권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시민사회와 인권협력체계 구축
  - 지역의 전문적인 인권활동가나 인권 NGO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 연구 및 인권활동 동아리 결성과 활동 지원’
  - 사회적 약자나 빈곤, 무장애도시공간, 주거, 환경, 노동, 문화, 사회보장, 안전, 참여 등 주제별로 인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집단별·분야별 인권 네트워크 결성 및 활동 지원’
  - 현재의 ‘민주인권포털’과는 별도로 시민들의 인권사업 제안 -> 토론 -> 사업 결정 -> 예산 반영 등의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완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권정책 온라인 시민 플랫폼’을 구축 운영
- 인권행정 지원지구 설립
  - 현재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교육센터, 인권평화재단,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유엔인권교육훈련센터 및 한국민주주의 전당 등의 건립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권행정 지원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 기구 운영’

- 인권지원지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인권교육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등 특정 분야 민간위탁 검토’
-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인권행정지원기구 설립을 목표로 하고, 광주교도소 부지의 ‘민주인권기념파크’의 기능과 내부 시설 구상 등을 고려해 ‘인권교육 전문 센터나 재단 설립’ 검토

## 5. ‘인권도시 광주’ 위상 제고

### □ 제1기 계획 평가 및 제2기 계획 방향

- 제1기 기본계획에서는 인권도시 광주의 인권교류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의 ‘민주·인권·평화센터’ 구상, 광주가 지닌 차별화된 인권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인권도시 브랜딩 전략 등이 제한되었지만, 부분적인 구상이나 연구용역으로 제한
- 5·18의 전국화·세계화 테제를 통해 실천해 왔던 광주의 연대를 새로운 인권도시 연대모델로 계승 발전해 나감으로써 침체 상황에 있는 인권도시 광주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 있는 연대활동을 재활성화
- 5·18 사적지 등 주요 5·18 공간을 세계 속의 ‘인권도시 광주’의 역사·문화·교육적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5·18 공간의 기념화 작업 본격 추진

### □ 주요 추진과제

- 국내 인권도시 연대회의 운영
  - 현재 광역과 기초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도시협의회 활동이 각 단위의 특성을 살리는 실천적 연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단위 인권도시협의회 활동 활성화’
  -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역 및 기초단위 지방정부가 공동의 정책 발굴 및 공동 추진,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정책의 제안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인권도시 연대회의’ 구성 운영
- 세계인권도시포럼 내 ‘국내외 인권도시정책 워크숍’ 정례화
  - 매년 두 차례 인권정책 의제를 설정하여 ‘국내외 인권정책워크숍’을 진행(5월

/10월, 1회는 세계인권도시포럼 내에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광주 이외의 인권도시가 주관하여 진행)

- 인권교육 및 인권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실행 매뉴얼 개발 운영함으로써 「인권도시 광주」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주요 인권정책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아시아 인권도시 연대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 인권도시들의 정책 추진 성과와 프로그램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하고, 인권도시 성장을 위한 연구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아시아 인권도시 세션」 지속적 운영'
- 2018년 아시아 인권현장 광주선언 20년을 기념해 '아시아인권현장 20주년 기념 후속 선언 준비'
-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발 국가의 인권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네팔 등의 진료소 운영 사업과 국제교류사업을 진단하여 '아시아 지역 지방정부의 인권도시 성장 프로그램 개발'

○ 인권도시 관련 국제 규범과 담론 확산

- 2013년 채택한 '광주 인권도시 원칙'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인권 이행을 위한 광주의 원칙' 준비
- 국제이주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다양성을 문화적 권리 차원에서 재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다양성과 인권」 프로그램 운영'

○ 5·18 기록물 및 공간의 기념화

- 5·18 관련 기록물의 수집, 보존, 연구,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기록물의 종합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위한 '5·18 기록물의 지속적인 수집과 관리' 추진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위해 '지역차원의 5·18진상규명 지원 체계 구축'
-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과 뮤지컬 제작 등 '5·18의 문화예술적 재현 활동 추진'
- 옛 광주교도소 부지, 국군광주통합병원, 505보안부대 등 주요 5·18 사적지에 대한 기념화 작업을 위해 '5·18 관련 공간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추진'

## 제7장 광주시 인권도시 추진체계

### 1. 추진체계 구축의 주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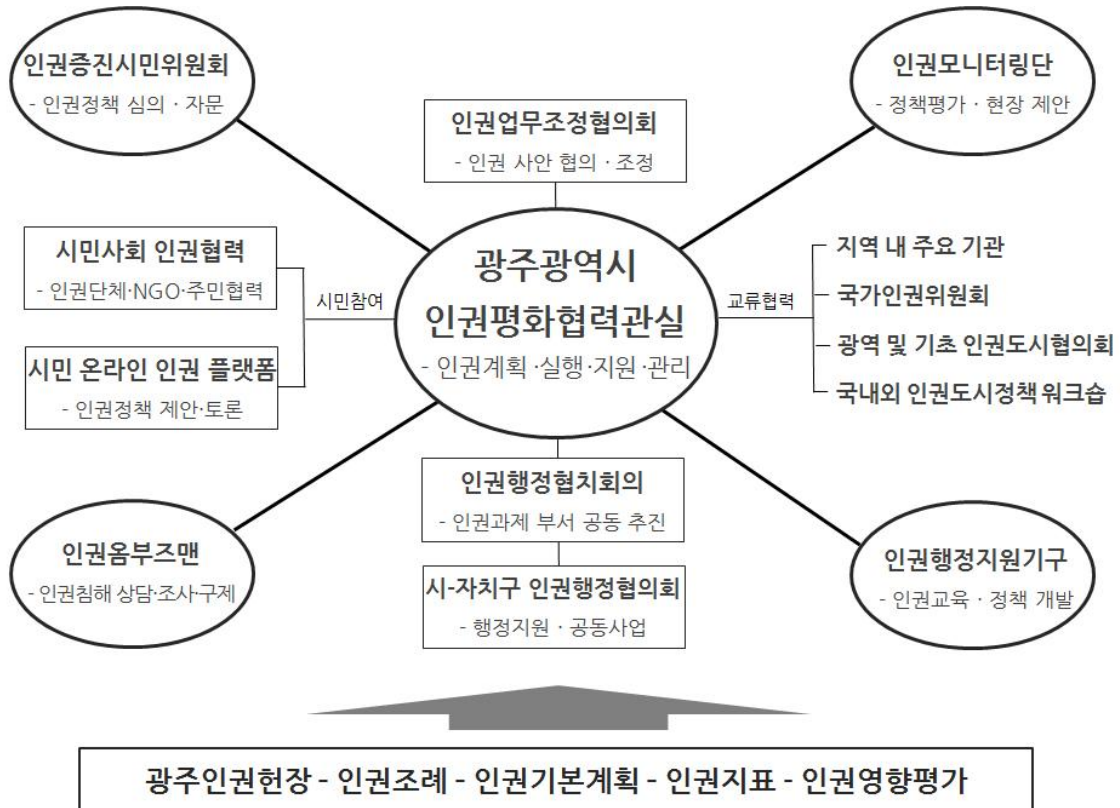
- 제2기 계획을 통해 ‘행정의 인권화’와 ‘인권의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지향해 나가야 함
  - 첫째, 광주시 행정차원에서 상층 단위의 ‘인권업무조정협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실무적 단위의 부서 간 공동추진과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인권행정협의회의’를 활발하게 운영해야 함
  - 둘째, 인권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인권정책 협치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행정지원기구이자, 인권정책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갖는 인권센터나 재단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셋째, 제1기 계획에서 제안한 “시민참여를 통해 삶의 현장의 인권을 의제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인권실천체계”를 현실화시켜가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국가인권위원회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인권교육, 인권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역인권사무소와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권도시를 위해서는 인권규범, 인권실행지구, 인권정책 등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야 함

### 2. 인권도시 광주 추진체계

- 인권도시 광주에서 인권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행정, 시민, 제도, 장치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되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 현재의 운영중인 제도와 장치, 그리고 인권행정 및 인권도시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장치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포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 현재의 장치 :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 인권평화협력관실,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인권침해 조사·상담·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인권옴부즈맨 등
- 새로 구축되어야 할 장치 : 인권교육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권행정지원기구, 인권정책의 평가를 담당할 인권정책모니터링단 등

<그림> 광주시 인권정책 추진 체계



- 인권도시 광주가 ‘행정의 인권화’를 지향하며 인권이 도시운영의 중심 가치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체장을 비롯한 행정주체들의 강한 의지와 부서들 간의 협력행정, 그리고 마을단위로 인권실천이 확산되기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이 중요함
- 인권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인권도시 광주’는 지역단위의 인권정책을 선도해 온 경험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함으로써 인권도시를 국내외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외 인권도시 간 협력 등에 특별

한 관심을 가져야 함

-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권정책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제8장 결론: 정책제언

- 인권도시는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도시의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도시임
-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선도적인 인권실천 모델들을 만들어 왔지만, 인권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가치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인권현장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권정책의 개발이 다소 미흡하고, 개발된 인권정책이 광주시의 행정 각 부서를 통해 이행되도록 조정하고 협력하는 체계는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인권정책으로 반영하고, 인권정책의 성과가 시민의 삶 속에서 검증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권행정의 순환적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행정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활 속 의견과 요구를 인권정책으로 직접 반영하는 참여와 소통의 인권행정 모델을 지향
- 인권이 개별적인 권리를 넘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의미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권정책이 행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인권협치행정이 요구됨
- 인권행정은 인권정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삶과 밀착된 생활 속 인권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에서 인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인권의 자력화’와 관련된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함
- 제2기 광주시 인권도시기본계획은 제1기 계획의 성과이자 한계인 ‘인권정책의 제도화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인권행정의 영역을 넘어 시민사회의 인권운동 영역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야 함
- 현재 광주지역 시민사회에서 인권 영역을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직과 인원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인권 연구 및 인권 활동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고 이들이 시민인권결사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권도시 광주’는 국제적 흐름인 포용도시 실천과 결합하여 도시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과 도시의 계획에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 나가야 함

- 포용도시 실천의 주요 전략을 ‘무장애 도시환경조성’으로 설정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을 지역이나 공간 별로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함
- 장애물 없는 도시공간 프로젝트에는 인권영향평가제도와 시민참여에 의한 공간 계획을 적용시켜 인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포용도시가 강조하는 시민참여의 원리를 실현시켜야 함
- 제2기 광주시 인권도시기본계획 시행기간은 시민주권, 참여, 협치 등이 시대적 가치로 부상하고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정책 추진에서의 협력 행정과 시민참여 확대를 지향해야 함
- 협력 행정은 협치 시스템을 통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부서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의 최종 성과를 특정 부서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에게 균등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권행정협치평가시스템’이 동시에 개발 운영되어야 함
- 시민참여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권리를 행정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해 가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음
- 첫째, 제도적 참여 방안은 인권조례나 행정조직에 시민의 몫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식적 자리를 활용하는 것임
  -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인권의 과제를 제안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주민 공청회 등에서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각종 행정 정보와 절차를 투명하게 개방하고 안내하는 역할 수행
- 둘째, 인권정치적 관점의 참여 방안은 지역사회의 인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슈화하는 생활정치운동으로, 행정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단체, 전문 활동가, 마을단위 인권모니터링 요원 등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셋째, 도시계획에 시민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새로 조성되는 물리적 공간이 인권의 원칙을 잘 준수하며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삶의 공간에 대한 인권적 감시와 고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

들의 인권 주체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인권도시 광주’는 제1기 계획을 통해 인권도시 운영 모델을 선도했던 경험을 되살려 인권도시 간 교류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인권도시운동이 국내외적으로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함



## 참고문헌

- 강현수, 2013, “삶의 공간을 지키고 보호할 권리”, 『공간주권으로의 초대』, 한울아카데미.
- 강현수, 2014, 『인권 도시 만들기』, 그물코.
- 광주광역시, 2014, 『2010-2013 광주광역시 인권백서』.
- 광주광역시, 2016, 『2014-2015 광주광역시 인권백서』.
- 광주발전연구원, 2011, 『광주 인권도시기본계획』, 광주광역시.
- 광주발전연구원, 2014, 『분야별 인권증진 정책 수립 연구』, 광주광역시.
- 광주발전연구원·한국인권재단, 2014, 『2014 한국 인권도시백서』.
- 광주발전연구원·한국인권재단, 2014, 『지방정부와 인권 연구보고서 2014』.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5. 3. 20, “홀로 사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4. 11. 21,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011,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014,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 국가인권위원회, 201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016,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 권중돈, 2015, 『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기곤, 2013a, “‘열린공동체’ 관점의 인권도시와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전남대학교5·18연구소.
- 김기곤, 2013b,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이해와 정책적 수용방안”, 『광주연구』, 제23호. 광주발전연구원.
- 김기곤, 2016, “광주광역시 인권지표의 체계와 실행”, 『지역사회와 인권-현황과 과제』, 제2회 한국인권회의 자료집.
- 김기곤 외, 2016, 『인권도시, 마을에서 인권을 찾다』, 미디어공방+팀.
- 김기곤, 2017, “‘포용적 인권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 인권정책의 방향”, 『광전리더스INFO』 38호, 광주전남연구원.
- 김왕배·김종우, 2012,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에 대한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 32집, 한국보건사회학회.
- 김재철, 2016, “광주인권현장과 인권도시”, 『지역사회와 인권-현황과 과제』,

- 제2회 한국인권회의 자료집.
- 데이비드 하비(Harvey, D.), 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3.
- 마사 누스바움, 한상연 옮김, 2015, 『역량의 창조』, 돌베개.
- 보건복지부, 2014, 『노인인권 길라잡이』.
- 보건복지부, 2015, 『201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성남시, 2016, 『성남시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2015,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 스티븐 P. 맥스 외, 국가인권위원회 옮김, 2011, 『인권도시: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의 약속』.
-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2001, 『윤리학』, 동문선.
- 앙리 르페브르(Henri, L.), 1996(1968), “The right to the city,” in H. Lefebvre, *Writings on Cities*, E. Kofman and E. Lebas (eds.), Cambridge, Mass: Blackwel.
- 앤디 메리필드(Merrifield, A.), 김병화 옮김, 2005, 『마주침의 정치』, 이후.
- 앤서니 엘리엇·브라이언 터너, 김정환 옮김, 2015, 『사회론-구조, 연대, 창조』, 이학사.
- 우필호·강을영, 2013, 『인권도시』, 한울아카데미.
- 유동철 외, 2014,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 윤장현, 2015, “인권연대를 위한 광주의 성찰과 도전”, 『세계인권도시포럼 발표 자료집』.
- 이남석, 2005, “소수자와 다수자의 아름다운 공존”, 『소수자와 다수자의 아름다운 공존』, 한울.
- 이발래, 201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9권 4호, 한국헌법학회.
- 이용교 외, 2014, 『인권과 복지』, 광주대학교 출판부.
- 이준일 외, 2015, 『인권행정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6, 『인권지표 시민모니터링 사업』, 광주광역시.
- 정성훈, 2012, “보편적 인권 정당화의 위기와 인권도시의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전남대학교5·18연구소.
- 정호기, 2015, “기념사업으로 본 ‘5·18의 의미 변용-민주성지, 문화도시, 인권도시

- 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1호, 한국언론정보학회.
- 조유향 외, 2016, 『치매노인의 인권』, 오월숲.
- 조효제, 2008, 『인권의 풍경』, 교양인.
- 조효제, 2016, 『인권의 지평-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후마니타스.
- 찰스 몽고메리, 윤태경 옮김,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2014, 미디어월.
- 최현, 2008, 『인권』, 책세상.
- 카렐 바삭, 박흥규 옮김, 1986, 『인권론』, 실천문학사.

- 광주시 민주인권포털 : <http://www.gjhr.go.kr>
-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 <http://www.gaok.or.kr>
- 서울 성북구 인권도시 : <http://www.seongbuk.go.kr>
- 서울시 인권 홈페이지 : <http://gov.seoul.go.kr/humanrights>
- 인권도시연구소 : <http://www.hrcity.or.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 <http://www.elis.go.kr>
- 정보공개포털 : <http://www.open.go.kr>
- 한국인권재단 : <http://www.humanrights.or.kr>

